



독일의 연방 의회 선거와 원자력 정책

2002년 9월 22일에 실시된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 탈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 집권 여당인 독일 사회민주당(SPD·사민당)과 동맹 90·녹색당(Alliance90/Greens)은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등 야당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정권 연장을 확정하였다.

독일은 1998년의 정권 교체 이후 2001년에는 원자력 발전 전력이 1,713억kWh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현실적으로 원자력 이용이 착실하게 증진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원자력 발전 시설의 가동 정지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사민당(SPD)/동맹90·녹색당 정권하에서의 독일의 원자력 활동 등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독일의 원자력 정책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독일의 국내 상황

1998년 정권 교체 당시 동맹 90·녹색당과 연립한 사민당(SPD)은 연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탈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중심 인물은 위르겐 트리틴 환경장관(녹색당)으로 여러 차례의 에너지·컨센서스 협의 결과, 연방 정부와 산업계의 타협점을 마련하고 2001년 6월 연방 정부와 산업계간의 탈원자력에 관한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법제화, 즉 원자력법을 동년 12월에 개정하게 되었다. <표 1>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의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독일원자력산업회의(DAtF)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지속이 일정 범위에서 인정받은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원자력이 전력의 안정 공급이나 지구 온난화 방지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폐지되어야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기독교민주

연합(CDU)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정권 교체시에는 재개정할 것을 표명하였다.

한편 1998년 당시 독일의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는 영국 또는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으로 수송하여 재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매년 수송때마다 반복되는 수송 저지 행동이나 당시에 이미 문제시되었던 수송 캐스크의 오염 문제 등으로 사용후 연료의 수송은 암초에 걸려 있었다.

에너지·컨센서스 협의 결과,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는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지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수년 내에 각 부지 내 또는 근방에 사용후 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동시에 연방 정부는 법령이 준수되는 한 원자력 활동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인정함에 따라 2000년 봄 이후 수년 동안 미뤄왔던 사용후 연료의 수송이 재개되었다.



〈표1〉 개정된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

-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전力量 제한(운전 기한을 송전 개시부터 32년간으로 하며, 지금까지의 운전 실적을 기본으로 2000년 이후의 발전 전力量을 19기 합계 약 2조6,233 억kWh로 설정함. 규정된 발전량에 도달하는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함. 발전소간의 전力量의 양도가 인정되며, 전체 원전의 폐쇄 시기는 일괄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음)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 금지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의무화
- 원자력 사고시의 손해 배상 적립금을 25억유로(약2,600억엔)로 증액
-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2005년 7월까지 직접 처분으로 제한(사용후 연료 재처리 금지)
- 발전소 부지 내의 중간 저장 시설의 확보 의무화

이와 같이 독일의 탈원자력 정책이 법률로서 정형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용후 연료 수송 등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의 독일 국내 정치에서는 환경 문제를 포함한 원자력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여론 조사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실업자 문제, 외국인 난민 문제 등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 사항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년 여름에 중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져 이번 선거의 향방이 마지막까지 불투명했다.

유럽 지역의 동향

독일 국내의 정치 상황과는 반대로 유럽 지역에서는, 특히 작년 후

반 이후 환경·에너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원자력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가 2002년 6월 26일 EU 위원회가 결정한 에너지 안전 보장 전략에 관한 문서이다. 보통 'Clean Paper'라고 말하는 이 문서가 결정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① EU 지역 내의 에너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는 것이 어렵다.
- ② 에너지 공급 수단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 ③ 지역 내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5.2%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동기간 동안에 증가되는 CO₂ 배출의 90%는 수송 부분에 의한 것이다.
- ④ 에너지에 관한 지역의 의존도는 2030년에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12%까지 높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토 의정서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것은 원자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으면 보다 어려운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유럽의 에너지 정책으로 새롭게 마련한 전략으로는 세계 개혁, 합리적인 에너지와 다양화 계획의 촉진, 신기술 개발의 촉진, 수송 수단간의 균형 확립, 건축 분야의 합리적인 에너지 추진 등과 함께 보다 환경에 영향이 적은 에너지원의 개발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촉진과 함께, 원자력에 관해서는 미래형 원자로 개발, 사용후 연료 관리 연구 촉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전이나 폐로 대책 마련,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저하되지 않고 인력이나 노하우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Clean Paper' 문안이 공표된 직후인 2001년 11월 27일, 독일 연방 정부의 베르너 뮐러 경제부장관은「미래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탈원자력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2020년경까지 실현 가능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운전중인 19기 원자력발전소의 폐지와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천연 가스와 석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는 시나리오 I 과, 천연 가스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II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시나리오 I에서는 국민 총생산 1인당 1차 에너지의 소비량이 연간 2.1% 감소시키는 것, 천연 가스의 수입 확대, 발전용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율을 6%(2000년)에서 13%로 끌어올리는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시나리오 II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2.7%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석탄 사용을 억제하고 천연 가스 이용을 더한층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이 경우 1차 에너지에 점유하는 천연 가스 비율은 41% 정도가 됨)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결론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에너지 수요의 억제, 기술 개발 촉진, 자유화 촉진, 발전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석탄 이용의 촉진을 언급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안을 가결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기였다. 즉 핀란드 의회는 2002년 5월 24일,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안을 가결하였다. 핀란드 정부의 제출안은

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의 확보 ② 러시아로의 의존도 인하 ③ 온실 효과 가스의 억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핀란드의 5번째가 되는 상업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 각 정당의 동향

독일의 선거는 정당 중심의 선거로서 정부의 정책 동향은 유력한 정당의 선거 강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은 각 정당의 원자력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주장 등으로 각 정당별 선거 강령을 비교해 보았다.

1. 독일 사회민주당 (SPD · 시민당)

1998년 연방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동맹90 · 녹색당과 연립 정권을 마련한 시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개혁의 정체됨을 없애고, 독일을 개혁하자」를 슬로건으로 하였다. 시민당의 선거 강령에는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 당의 에너지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급 안전성, 경제성, 가격 안정성 및 환경 친화성에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국가 또는 자원에 에너지 공급을 의존하지 않는 것, 즉 적절한 에너지 · 혼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의 갈탄 · 석탄 · 천연 가스 ·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은 ‘석유로부터의 탈피’ 전략을 확립하고 수입 석유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선진국으로서의 최신의 에너지 기술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복합 가스 터빈 기술을 활용하고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효율을 높인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은 2010년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2배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국가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조성 정책을 실시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적절한 생산 단가의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관을 창설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련된 국제 협력의 중심적인 기능과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당의 강령에서 탈원자력은 이미 정해진 노선으로 되어 있다.

2. 동맹90 · 녹색당 (Alliance90/Greens)

「Ecology - 혁신당」을 표방하는



신연립 협정 「혁신·정의·지속 가능성」(2002년 10월16일)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동맹90·녹색당(Alliance90/Greens)이 2002년 10월 16일 합의한 신연립 협정 가운데 원자력 정책 관련 부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 6월 14일의 협정에 따라 연방 정부 및 전력 업계는 앞으로의 원자력발전소 이용을 기한부로 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과 함께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에 대한 운전을 보장하는 것에 합의함.
2. 이 합의는 정서적으로나 그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적이나 국제적, EU 내에서도 유효함.
3. 2002년에 Mülheim-Karlich 원자력발전소를 최종적으로 정지하고, 2003년에는 Stade 원자력발전소를 정지함.
4.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수송을 2005년 7월 1일에 금지하기까지는 독일 국내에 있어서의 원자력 관련 수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마다 중간 저장 시설을 가동 개시 가능한 상태로 할 필요가 있음.
5.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지 선정 수속에 관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연방 정부는 1998년의 연립 합의에 따라 최종 처분지의 선택에 관한 지침과 선택 수속에 관한 계획을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최종 처분지 선택에 관련된 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문제에 대해서 연방 정부는 폐기물에 관한 발생 책임을 갖는 전력 산업계와 협의를 갖는다.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지 결정에 관한 문제와 함께 그의 관찰권과 수속에 관한 문제는 법률 사항으로서 결정함.

녹색당(1993년 구 동독의 체제 비판 운동으로부터 생겨난 동맹90과 통일회파(統一會派)를 결성)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률을 2006년까지 2배로 늘리고 환경 기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것 이외에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액시키고, 재생 에너지 조성을 강화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에 세계환경기구를 창설하는 것 등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탈원자력,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처 강화, 신자연보호법 제정, 환경 중시형 농업 강화, 전기나 가솔린 등의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강령은 다음과 같다.

- 석유·석탄·원자력에서 태양·풍력으로 : 대기 보존
- 환경이 직장을 창출한다.
- 태양의 나라 : 탈원자력 - 태양 에너지의 시대
- 이와 같이 환경 중시, 탈원자력, 재생 가능한 에너지 노선을 제창하고 있다.

3.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이번 선거에 제시된 CDU/CSU 공동 정책 강령에는 안전 보장, 경제성, 환경 친화성을 미래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이미 한 나라 수준으로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유럽 전체에 있어서의 에너지 공급 서비스의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로 아래와 같은 시책을 언급하였다.

- 열공급, 전력, 교통 분야에 있어 시장성을 고려한 합리성의 추구
-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환경과 조화를 있고 경제성 있는 기술 조성
-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연관성을 유지한 에너지의 연구 개발
- 화석 연료 발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고 또는 배출되지 않는 기술 투입
- 원자력 이용
- 복합·가스 터빈 발전, 수소 연료 이용 기술, 연료 전지 이용의 촉진
- 바이오매스 이용 등 새로운 에너지 이용의 증진

4. 자유민주당(FDP)

FDP의 「시민강령 2002」에는 재정·경제 정책을 중심 테마로 하여 최고 세율을 35%까지 감세하는 것과 환경세 폐지, 병역 의무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FDP는 지속 가능한 미래성이 있고 효과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향하고,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탈원자력 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5. 민주사회당(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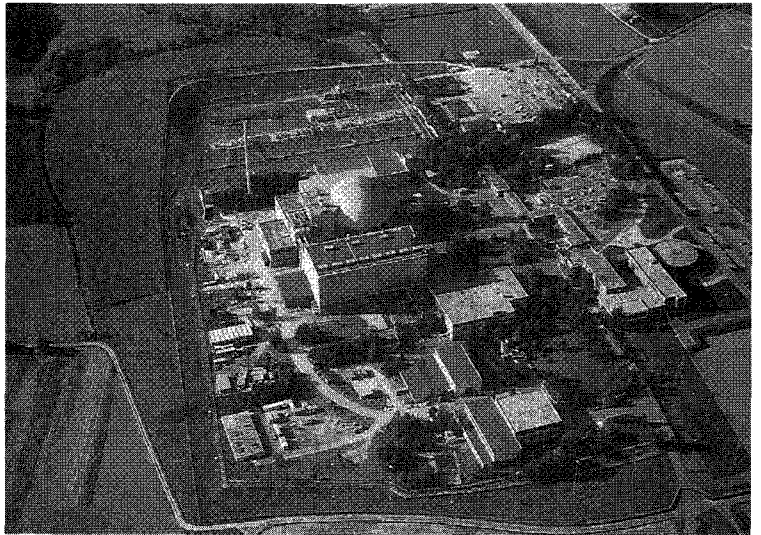
구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을 전신으로 1990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된 PDS는 녹색당과 같이 지금까지 탈원자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공약한 강령에서도 원자력 이용은 무책임한 것으로 독일 국내의 원전 운전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또한 사용후 연료 수송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의 이용 촉진을 표방하고 있다.

9월 22일의 연방 의회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지금까지의 정권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초 야당인 CDU/CSU의 우세가 점쳐졌는데, 그 해 여름 독일 동부를 강타한 대홍수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 두 번에 걸친 슈뢰더(SPD)와 슈도이바(CSU)와의 TV 토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이락크 대응 등으로 인해 종반에는 국민의 SPD 지지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원자력에 관한 여론 조사

2001년 11월 27일, 독일원자력산업회의(DAtF)가 알렌스바하연구소에 위탁하여 2001년 8월부터 9월에 실시된 원자력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약 2,000명의



독일의 Obrigheim 원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응답 받은 조사는 탈원자력 합의 이후 처음으로 조사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 받았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많은 독일 국민은 원자력이 미래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22%가 앞으로 이와 같은 협정에 따라 원자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국민의 대다수는 탈원자력 협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의 정권에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탈원자력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 47%,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 : 26%, 모르겠다 : 27%).

○ 61%의 국민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3분의 2의 국민은 앞으로 모든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포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더욱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원자력의 찬성·반대와는 상관없이 전체의 68%가 독일에 있어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론

이번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독일 사회민주당(SPD)/ 동맹90·녹색당의 정권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이후 연립 협상을 통한 제2차 연립 정권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선거 과정에서는 쟁점화 되지 않았지만 이후 독일은 이미 정해진 노선에 따른 탈원자력의 길로 걸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독일의 에너지 정책(2001년 11월)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환경 정책으로 보지 않더라도 에너지 정책 전반을 추진함에 있어 원자력이라는 선택을 포함하지 않는 독일의 앞길은 우여곡절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原子力eye〉 2002, Vol.48 No.1